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법은 개인이 법률행위를 통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인 ‘대리’를 두고 있는데, 대리에서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본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자를 대리인, 대리인과 거래하는 당사자를 상대방이라고 한다. 대리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는 임의대리와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지는 법정대리가 있다. 대리는 매매 계약 체결, 공적 서류 발급, 행정 기관에 하는 신고 등 일상생활의 법률행위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임의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또한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현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현명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현명이 없었더라도, 대리인이 본인 대신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대리에서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이므로, 경우에 따라 대리인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ㄱ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이고 쌍방 대리는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한 명의 대리인이 양측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기계약의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쌍방대리의 경우 양측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받지는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울 때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이미 정해진 채무를 그대로 갚아 나가면 되는 상황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본인이 별도로 허락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될 수 있다.

(나)

상인이 영업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할 때나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营业을 수행해야 할 때 등에는, 모든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데에 비용과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상인인 보조상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여 상거래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도모한다. 보조상의 대표적 예로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은 같지만 거래 시 ㉠ 누구의 명의로 행위하는지가 서로 다르다.

먼저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상인의 영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의 경우, 특정 지역 고객과 이미 신뢰를 쌓아 온 상인을 대리상으로 삼아 거래를 지속적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대리상에는 계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이 있는데, 계약대리상은 다른 상인을 위해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대리상으로, 본인의 명의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때 본인은 대리상이 대리하는 상인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반면, 중개대리상은 거래를 알선할 뿐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하지 않는다.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營業을 보조하므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 대리상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이때 ‘자기 명의로써’라는 것은 위탁매매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직접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타인의 계산으로’라는 것은 그 거래의 이익과 손해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주식을 매매하려는 개인의 경우, 주식 시장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위탁매매인에게 매매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매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마친 때

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알리고,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위탁매매인이 행한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해야만 그 거래의 결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상법은 본인이나 위탁자의 이익뿐 아니라 보조상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다양한 권리를 인정한다. ㉡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수수료나 비용 등을 받아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도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위탁자를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 또한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의 거래가 증가하고 그것으로 인해 대리상의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위탁매매인에게는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직접 자신이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 개입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현명(顯名)’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
- ②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현명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효과는 언제나 본인에게 귀속된다.
- ③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상대방에게 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④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자(使者)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 ⑤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현명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한다.

0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리권이 부여된다.
- ② 대리 제도는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법률행위를 타인을 통해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
- ③ 대리인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④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대리인의 사익 추구로 인한 본인의 이익 침해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⑤ 대리인이 기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허락이 필수적이다.

03

(나)의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타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거래를 대리하지만,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수행한다.
- ③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모두 수수료나 비용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
- ④ 대리상은 거래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위탁매매인은 통지와 함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진다.

0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본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인이 얻는 이익이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는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가 없는 물건을 매매할 때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 ④ ㉠과 ㉡는 모두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영업 부류 거래를 할 수 있다.
- ⑤ ㉠과 ㉢는 모두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

05

〈보기〉의 상황에 대해 윗글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가전제품 제조사인 A사는 특정 지역의 판로 확대를 위해 현지 상인 B와 계약을 맺고, B가 A사의 명의로 고객들과 직접 가전제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ㄴ. 주식 투자자 C는 전문적인 거래를 위해 주식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D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D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익은 모두 C에게 돌아갔다.
 ㄷ. 건물주 E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권을 수여받은 F는 임차인을 구하던 중, 자신이 직접 그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E의 대리인 자격과 임차인 자격으로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① ㄱ에서 B는 A사의 보조상인 대리상 중 계약대리상에 해당하며, B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직접 A사에 귀속된다.
- ② ㄴ에서 D는 위탁매매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거래를 수행하였지만, 거래의 경제적 손익은 타인인 C에게 귀속된다.
- ③ ㄷ에서 F의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F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E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④ ㄱ의 B와 ㄴ의 D는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거래 내용을 각각 A사와 C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⑤ ㄷ에서 F가 E의 대리인 자격과 임차인 자격으로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E의 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겠군.

06

윗글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탁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함으로써 위탁자의 신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은닉하는 상인이다.
- ②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중개 전문 상인이다.
- ③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하게 거래하더라도 그 차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
- ④ 자기 명의로 거래하지만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은 위탁자에게 귀속시킨다.
- ⑤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위하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위탁자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07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대리권 행사가 제한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②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본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③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와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 ④ 상대방이 대리인과의 거래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 ⑤ 대리인이 본인의 수권행위 범위를 벗어나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08

윗글의 필자가 〈보기〉의 견해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법학자 X는 "대리 제도의 핵심은 본인의 의사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본인이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대리인 자신의 판단이나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원칙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로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면 이는 대리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 ① 대리인이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X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겠군.
- ②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X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겠군.
-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이 대리인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X의 주장은 타당하겠군.
- ④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使者)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적절하겠군.
- ⑤ 대리권의 발생 근거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X의 견해를 수용하겠군.

09

윗글의 필자가 ‘보조상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인의 영업 활동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인의 독립성을 일부 희생시키는 장치로 본다.
- ② 전문성을 갖춘 타인의 조력을 통해 상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본다.
- ③ 본인과 보조상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법적 규제 없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④ 보조상의 권익을 본인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상업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⑤ 상거래 규모의 확장이 가져오는 위험을 본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보조상의 대외적 책임을 면제해주려 한다.

10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거래의 일방 또는 양방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한된다.
- ②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유는 대리인 한 명이 두 당사자를 모두 대리할 경우 어느 한쪽의 이익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기존의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행위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자기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④ 본인이 자기계약에 동의했다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원칙적인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

11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리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② 대리의 일반적 원칙을 민법의 관점에서 설명한 후, 상법상 보조상 제도를 통해 그 원칙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대조하고 있다.
- ③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보상 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각 단계에서 본인이 취해야 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가)에서 제시한 대리의 원칙이 (나)의 보조상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며 두 제도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12

밑줄 친 ㉠,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짝지은 것은?

- ① ㉠: 이번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 / ㉡: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 ② ㉠: ****누구****나 그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다. / ㉡: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부했다.
- ③ ㉠: ****누구****라도 좋으니 이 짐을 좀 도와주세요. / ㉡: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달라 서로 ****불리****된다.
- ④ ㉠: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 ㉡: 이번 결정은 회사에 매우 ****불리****한 처사이다.
- ⑤ ㉠: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 / ㉡: 사실과 ****불리****된 이론은 공허할 뿐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시장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
- ② 매매 대상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장 가격이 존재해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3의 상대방이 없어야 한다.
- ④ 위탁매매인이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이행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해야 한다.
-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이 아닌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표시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계약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최종적인 주체는 본인이 된다.
-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지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매도했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야 거래 결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④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모두 본인이나 위탁자를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
- ⑤ 중개대리상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거래 성립 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에서 자유롭다.

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대리 제도’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리 제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규정이다.
- ② 대리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타인에 의해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대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법치주의로 대체한다.
- ④ 대리 제도는 타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보충한다.
- ⑤ 대리 제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상거래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해 상법에서 독자적으로 창안한 제도이다.

01 개념 집중 분석

정답: ①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

[출제의도]

대리 제도의 핵심 절차인 현명의 개념과 기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①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 따르면, 현명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② 둘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현명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귀속된다고 하였으므로, '상관 없이 언제나' 귀속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발생 근거일 뿐이며, 현명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별개의 의사표시이다.
 ④ 셋째 문단에서 대리인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둘째 문단에 따르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뿐,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효력이 소급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다.

02 내용 일치/불일치

정답: ⑤ 대리인이 기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허락이 필수적이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대리권 행사의 제한 사항과 예외 허용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⑤ 셋째 문단에 따르면,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운 '이미 정해진 채무를 갚는 상황' 등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다. 본인의 허락은 이와 별개로 제시된 또 다른 예외 사유일 뿐, 채무 이행 시 필수 조건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문단에서 임의대리는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대리가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③ 셋째 문단 초입에서 대리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본인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유로 본인의 이익 침해 위험을 들고 있다.

03 비교·대조

정답: ⑤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진다.

[출제의도]

두 보조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법적 책임과 의무 관점에서 정밀하게 비교한다.

[정답 풀이]

- ⑤ (나)의 여섯째 문단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위탁자에게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위탁매매인'에 대한 설명이다. 대리상에게 이러한 담보 책임이 있다는 언급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넷째 문단에서 두 보조상 모두 독립된 상인이며 보조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② 다섯째 문단과 여섯째 문단에서 대리상(채약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행위한다고 설명한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 모두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④ 다섯째 문단과 여섯째 문단에서 각각 통지 의무와 계산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04 ㉠~㉣ 밑줄 설명

정답: ① ㉠은 본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제의도]

보조상에게 인정되는 다양한 권리의 발생 조건과 행사 범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①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수수료나 비용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을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② 마지막 문단에서 보상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개입권(㉢)은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④ 다섯째 문단에서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영업 부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의무가 있다.
 ⑤ 여섯째 문단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시 책임을 지는 것은 위탁매매인이며, 이는 권리(개입권)가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

05 [보기] 사례 적용

정답: ⑤ ㄷ에서 F가 E의 대리인 자격과 임차인 자격으로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E의 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겠군.

[출제의도]

지문의 대리 및 보조상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⑤ 셋째 문단에 따르면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울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ㄷ에서 F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E가 별도로 허락했다는 사정도 없다.

[오답 풀이]

- ① ㄱ의 B는 본인(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대리상이며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② ㄴ의 D는 자기 명의로 타인(C)의 계산으로 매매하므로 위탁매매인의 정의에 부합한다.
 ③ ㄷ의 F는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계약 상대방이 되었으므로 자기계약이며, 이는 원칙적 금지 대상이다.
 ④ 대리상과 위탁매매인 모두 지문에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06 핵심 개념 정의·범주

정답: ④ 자기 명의로 거래하지만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은 위탁자에게 귀속시킨다.

[출제의도]

위탁매매인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실질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④ 여섯째 문단에 따르면,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계약 당사자가 되지만,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하므로 이익과 손해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명의로 아닌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
 ② 위탁매매인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지문에는 불리한 가격일 때 차액 부담 의무만 명시되어 있으나, 타인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본질상 유리한 차액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단, 지문 근거만으로도
 ④ 가 명확한 정답이다).
 ⑤ 여섯째 문단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위탁자에게 갚아야 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07 인과/조건 추론

정답: ②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본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제의도]

대리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② 셋째 문단에서 대리인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이므로, 대리인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지문은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주체'임을 강조할 뿐, 정보 전달 과정의 '왜곡'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③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제도이지, 주체와 효과 귀속자를 일치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다.
 ④ 이는 현명주의와 관련된 설명이며, 대리권 행사의 '제한(자기계약 금지 등)'의 직접적 이유는 아니다.
 ⑤ 대리권 범위 내라면 공적 업무 수행도 가능하므로 이를 막는 것이 제한의 이유는 아니다.

08 [보기] 대립 관점

정답: ① 대리인이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X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겠군.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 논지(대리인의 주체성)와 대립되는 관점을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① 윗글의 셋째 문단에서는 대리인이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X는 대리인을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필자는 X가 대리인의 주체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을 수 있으나, 그 근거(주체성으로 인한 이해충돌)가 다르므로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적 자치는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인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④ 윗글은 대리인이 사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를 강조하는 X의 견해를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⑤ 수권행위는 임의대리의 발생 근거일 뿐,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X의 견해를 수용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09 필자 관점·태도

정답: ② 전문성을 갖춘 타인의 조력을 통해 상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본다.

[출제의도]

보조상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자의 긍정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나)의 첫째 문단에서 보조상 제도는 상거래의 경제성(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업 등을 보조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 설명한다.

[오답 풀이]

- ① 보조상은 '독립된 상인'이라고 넷째 문단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을 희생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상법에서 다양한 의무와 제한(통지 의무, 경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상법은 본인(위탁자)과 보조상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려 하며, 어느 한쪽을 우선시한다는 근거는 없다.
- ⑤ 위탁매매인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보조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0 개념 집중 분석

정답: ④ 본인이 자기계약에 동의했다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다.

[출제의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취지와 예외 허용의 논리적 근거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셋째 문단에서 본인이 허락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지문에 없다. 본인의 허락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본인의 의사 표시일 뿐, 위험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셋째 문단에서 대리인이 사익을 추구하여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 때문에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 ② 쌍방대리의 경우 양측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③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의무 실현은 예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⑤ [A]에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한 뒤,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울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11 문단 기능 파악

정답: ② 대리의 일반적 원칙을 민법의 관점에서 설명한 후, 상법상 보조상 제도를 통해 그 원칙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대조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 전체의 구조와 (가), (나)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고리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가)에서는 민법상 대리의 정의, 현명주의, 대리권 제한 등 일반 원칙을 다루고, (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법상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라는 구체적 보조상 제도를 소개하며 명의의 주체 등을 대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역사적 변천 과정(고대→현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갈등 사례나 보상 체계의 '장단점 분석'은 지문의 핵심 전개 방식이 아니다.

- ④ 대리권의 '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 ⑤ (나)는 (가)의 원칙이 보조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지 않으며, 계약대리상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등 (가)의 대리 and 이어지는 내용을 다룬다. 두 제도의 '단절'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12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① ㉠: 이번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 / ㉡: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유사한 용례를 찾는다.

[정답 풀이]

- ① ㉠은 정해지지 않은 인물을 가리키는 의문 대명사로, 책임 소재를 묻는 문장의 '누구'와 일치한다. ㉡은 이익이 되지 않거나 전개상 좋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조건이 좋지 않음을 뜻하는 용례와 일치한다.

[오답 풀이]

- ② ㉢은 적절하나, ㉠의 '누구나'의 '누구'는 특정하지 않은 아무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으로, 정해지지 않은 인물을 묻는 ㉠과 다르다.
- ③ ㉣의 '불리'는 '분리(分離)'를 잘못 쓴 사례로, 이익과 관련된 지문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 ④ ㉠의 '누구도 없었다'는 전체 부정을 위한 강조로 쓰였다.
- ⑤ ㉣의 '불리된' 역시 '분리된'의 오용 사례이거나 나뉘어 떨어짐을 뜻하여 지문의 '이익이 없음'과 다르다.

13 생략 전제/함축 추론

정답: ② 매매 대상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장 가격이 존재해야 한다.

[출제의도]

개입권 행사의 법적 전제 조건과 그 취지를 통합적으로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② 마지막 문단에서 개입권은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위탁매매인이 스스로 상대방이 되더라도 객관적 시세가 있다면 위탁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적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오답 풀이]

- ① 수수료 수준은 개입권 행사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 ③ 개입권은 제3의 상대방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 시세가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④ 이행담보책임은 위탁매매인의 기본 의무이며, 이를 면제받는 것이 개입권의 전제는 아니다.
- ⑤ 지문은 개입권의 대상을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제시할 뿐,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조건으로 들지 않았다.

14 전개 방식

정답: ⑤ 중개대리상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거래 성립 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에서 자유롭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각 보조상의 의무와 권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⑤ (나)의 다섯째 문단에 따르면, 대리상(계약 및 중개 포함)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개대리상도 통지 의무를 지닌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문단에서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상대방 인지 가능 시)를 설명하고 있다.
② 다섯째 문단에서 계약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행위하며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였다.
③ 여섯째 문단에서 불리한 가격 거래 시 차액 부담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두 보조상 모두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15 핵심 개념 정의·범주

정답: ④ 대리 제도는 타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보충한다.

[출제의도]

지문 도입부에 제시된 대리 제도의 근본 취지와 사적 자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첫째 문단에서 대리는 일상생활의 법률행위가 타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대리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지, 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아니다.
② 대리는 자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③ 대리는 본인의 의사(수권행위 등)에 기초하여 작동하므로 사적 자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대리는 민법의 기초 원칙에서 출발하여 상법으로 확장된 것이며, 상거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